

# 전라권, 농촌융복합산업 선도...매출액 6개 권역 1위

### 경업체 2만4228곳 7만3708명 고용...인증 비율 2.6% 평균 웃돌아 2020년 매출액 5조3042억원...경영체당 매출 2억1893만원

전라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와 종사자 규모는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두 번째로 크지만 경영체당 평균 연 매출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2억1893만원으로 나타났다. 판로 개척과 경영자금 확보에 유리한 '법적 인증' 경영체는 60여 곳으로, 전체 경영체의 2%대 비중을 머물렀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에 담겼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이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식품·관광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1차 유·무형 자원과 '2차' 제조·가공, '3차' 체험·관광을 결합한 이른바 '6차 산업'으로 불리며, 농촌 창업에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농가·법인)는 총 10만 4067개다. 이 중 농가가 8만9525개로 전체의 86%

이고, 법인은 14%인 1만4542곳이다.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전라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는 2만4228개이다. 경상권(2만9359개)에 이어 6개 권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의 23.3% 비율을 차지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이어 충청권(2만748개), 강원권(1만1873개), 수도권(1만4057개), 제주권(3804개) 등 순으로 많았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전국에서 1805개로, 1.7% 비중을 나타냈다.

전라권 경영체 가운데 인증 비중은 2.6%(2만 4228개 중 618개)로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았다. 인증 경영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2.7%(3804개 중 104개)를 나타낸 제주권이었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전체 매출액은 23조 2564억원, 경영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85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라권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의 지난 2020년 전체 매출액은 5조3042억원으로, 6개 권역 가운데

###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장 많았다.

단 경영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1893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3억1290만원)이었고, 강원권(3억579만원), 제주권(2억 3417만원), 전라권, 충청권(1억9551만원), 경상권(1억6947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명)

영체당 3.5명), 수도권 5만5105명( " 3.9명), 강원권 3만2299명( " 2.7명), 제주권 1만3605명( " 3.6명) 등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컸다.

경영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유형별로 보면 인증 경영체 7.8명, 미인증 경영체 3.1명으로 나뉘었다. 경영체당 평균 매출액도 인증 경영체는 14억5540만원으로, 미인증 경영체 평균(2억1560만원)의 6.8배 수준 높았다.

한편 소비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해했다는 응답률은 52.2%였다. 상품 구매자의 87.3%, 체험(관광) 경험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 접근 방법은 방문·구매 등 직접 경험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소통 방식·SNS·블로그 39.5%, 친구·동료·지인 31.0%, 가족·친지 17.8% 순으로 많았다. 반면 농촌 체험 및 관광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인터넷 소통 방식·SNS·블로그가 60.5%로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지인 46.8%, 방문·구매 등 직접 경험 30.9%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 사법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사랑담은 김치 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양지역 농협,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광양시연합회 회원 등 50여명은 최근 배추김치 300포기를 담가 지역 마을회관과 고령 농업인에 전했다. <전남농협 제공>

## 광주 '이달의 새농민상'에 최명자·김용배씨 부부

영농 기술 연구에 힘쓴 최명자·김용배씨 부부(서광주농협)가 농협중앙회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열린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이 최씨 부부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 배명농장을 운영하는 최씨 부부는 수노작, 이도작 맥류를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선도 농가에서 습득한 영농 기술을 연구에 집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1965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선도 농업인에게 선정·시상하는 제도이다.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



최명자·김용배씨 부부가 이성희(뒷줄 왼쪽 두 번째) 농협중앙회회장과 문병우(맨 왼쪽) 서광주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이달의 새농민상' 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선도 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한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수상자 부부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고령 농업인과 농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의 가교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축산단체 반발... "정책 전면 철회 촉구"

### 축산농가 구제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축산물의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농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육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죽을 일보 직전에 내몰린 축산농민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육값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다.

또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의 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 축산물의 일부 물량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이에 대해 "밥상물가 진정을 발미로 한 식량주권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며 "정 전권과 다르지 않게 사육값 폭등 대책 등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 농정을 몰가 잦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경기념관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이날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

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 2026년부터 소고기·유제품의 관세 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우리 국민 밥상 위 의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소고기 자급률은 36.8%, 우유 자급률은 45.7%다.

협의회는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포인트에 불과한데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신보,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작

### 원금 최대 90% 감면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가 이달부터 연수문리 155-33해 경초소양해상[보관자:김형재]

10월 전남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다중채무자의 재지원 일환으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를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전

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기연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는 2종의 서류만으로 2주 이내 신속하게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 기금' 출범 전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2개 업체가 모두 9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55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828	1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1079 2456㎡ [지상위]답식새숙목포항매각, 토지일부도로이용중		26,521,200 26,521,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타경 910	3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1277-6 1499.5㎡ [공유]유자박순애 1/6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623,520 4,623,520	지분매각
2022타경 23	1	강진군 적전면 현산리 839-4 2718㎡ [공유]자진영자3/21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8,930,440 8,930,440	지분매각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1타경 828	2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321-10 1층88㎡ 2층 84.85㎡ 제시와 사무실 등 24㎡	창고및농가주택	123,154,600 123,154,600	건물만매각, 제시외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대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대수신보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인사청탁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대수신고인 대수보보증금의 미납으로 생료되는 경우 그 공유자가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7. 2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8. 1.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행정지원부 임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하여 기일입찰방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방에 투입하면 된다. 대수신보의 입찰방은 최지대수신고인 1층(101호)에 해당하는 광주지방법원 행정지원부 또는 본관을 통하여 기일입찰방에 투입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부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방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대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대수신고인과 차순위대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대수신보보증금의 입찰자가 출품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매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기일 이후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도 지정된 날의 3월경까지 종전 대수신고인 매각대금 및 지면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상권등기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거복지위원회에서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변의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 자득권상환을 마친 입찰자인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연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연세서, 현황조사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유압방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연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에 미납시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신변보증도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만일보증금 청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대수신고인 결정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할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제기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보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보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연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수신보인이 제출한 대수신보보증금 반환합니다.  
매각허가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관련보통]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판결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공되는 물건에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연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윤정원